

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

김동주(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장) 외

-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에 따라 도시권이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, 새로운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로 부상
 - 영국은 RDA(광역경제권)에서 도시권(city-region) 등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연합·기업파트너십(Local Enterprise Partnership: LEP) 체제로 전환
 - 프랑스는 세계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메트로폴(Métropole) 육성 추진
- 해외의 주요 도시권은 광역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협력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도시권 차원의 발전 목표수립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공동 추진
 -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
 - 도시권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보유하고 지방세·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도시권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

〈〈 해외 도시권 정책사례의 시사점 〉〉

-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천수단으로 도시권 정책을 추진
 - 5+2 광역경제권 내 도시권을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성장 역량의 결집과 확산 촉진
- 도시권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,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재원 마련이 급선무
 -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문제의 지자체 간 조정 및 연계·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동의 협의체 등 추진조직 구성
 - 도시권 정책추진기구, 도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정책의 집행력 향상

I. 도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

● 지구촌 경제시대의 지역거점 역할 증대

-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은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인구와 산업 등이 집적되어 실질적인 경제권 역할을 하는 도시권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
 - ※ Foreign Policy(2009)는 미래 메가트렌드에 따른 주요 이슈(the next big thing)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도시권이 세계 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新중세시대(Neomedievalism) 도래 전망

●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

- 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제력 및 혁신 역량, 정주환경 역량을 결집시켜 그 성과가 광역경제권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을 촉진
 - ※ 7개(5+2) 광역경제권 정책(2008)은 광역시·도 전체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, 인프라 등 부문별 발전에 치중함에 따라 성장역량의 공간적 결집 강화 필요
- 지방대도시권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지역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다핵적 성장발전을 견인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

● 녹색성장 촉진

-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지역을 녹색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
- 광역교통, 물·자원 순환, 환경문제 등은 도시권 차원의 대처가 효율적임

● 개별 지자체의 중복적 투자로 인한 과개발 방지 및 행정효율성 제고

- 도시권 육성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 계획에서 벗어나 생활권의 광역화를 고려한 지역개발사업의 공동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재정부담 완화¹⁾

1) 일부 경전철사업, 대형 문화·체육시설 건설 등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비효율과 지자체의 재정적자 부담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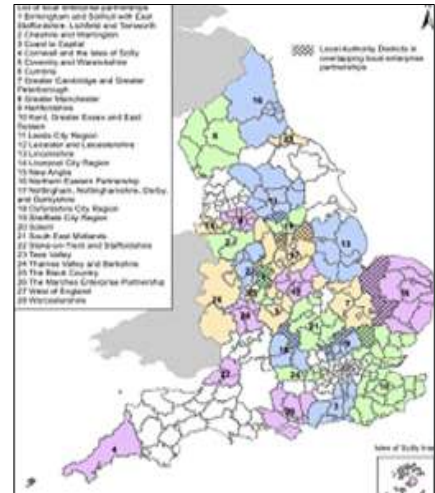
II. 해외 도시권 정책동향

● 영국

- 1999년부터 시행한 RDA(광역경제권) 중심의 지역발전에서 도시권 등 지자체연합·기업파트너십(Local Enterprise Partnership: LEP) 정책으로 전환

- 교통·통신 발달로 광역화되는 도시경제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런던중심의 지역발전구조에 대한 개선을 도모
- 2010년부터 LEP 단위로 인적자원 개발, 주택, 인프라, 중소기업 지원,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자체간 협력강화

[그림 1] 영국의 LEP 지역



● 프랑스

- 세계경제 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메트로폴(Métropole) 육성 추진

- 코뮌 간 연계·협력차원에서 대도시공동체(communauté urbaine)를 구성하여 농촌 등 소외지역 발전 지원, 서비스시설의 공동관리 등을 추진
- 2010년에는 유럽연합 등 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며, 협력사업을 통한 비용절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트로폴(Métropole) 육성

[그림 2] 프랑스의 11개 메트로폴



● 미국

- 1990년대 이후 교외화, 교통혼잡, 대기오염 등에 따라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정책관리 체제 강화

- 포틀랜드 광역계획기구(Metro), 남부캘리포니아연합(SCAG), 시애틀광역협의회(PSRC)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

III. 해외 도시권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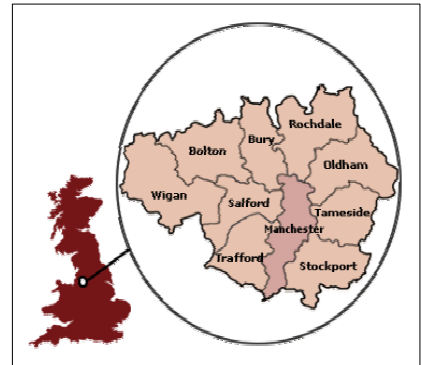
1. 영국의 맨체스터(Manchester)도시권

● 배경

- 맨체스터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²⁾는 광역적 도시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6년 광역맨체스터협의회(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: AGMA)를 구성

- 2011년 광역맨체스터협의회는 영국 최초로 Combined Authority(CA)로 승격되면서 교통계획, 계획허가, 도시재생 분야의 권한 일부를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음

【그림 3】 맨체스터 도시권의 위치



● 목표 및 전략

- 거점 및 연계기능 강화, 지식기반산업 확충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 도약을 목표
 - 2020년까지 도시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.9%(영국 평균 2.6%)를 목표로 영국 남부 지역과의 발전격차 축소 및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
- 도시권 발전을 위해 생산성 강화 등 4대 전략 추진 및 6대 신성장동력(accelerators) 육성³⁾
 - 생산성 강화: R&D 협력을 통한 지식·기술 확산, 핵심 분야 종사자의 역량 향상
 - 시장수요 확대: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로 세계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
 - 인재양성: Golden Triangle(교육-연구-산업 부문 간 협력) 구축을 통한 인재 육성
 - 지속가능성장: 주거, 교통, 도시재생 등 정주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

맨체스터도시권 경전철(Metrolink) 프로젝트

- 도시권 내 교통연계 강화를 위해 1992년 개통한 Metrolink는 맨체스터도시권 교통기구(GMPTE)에 의해 운영되며, 2016년까지 MediaCityUK, 맨체스터공항과 연계 추진
- GMPTE는 도시권 내 교통서비스 공급 및 기반시설 조성권한을 보유하며, 광역맨체스터협의회(AGMA)는 이사회를 통해 관리·감독



2) Bolton 등 맨체스터 인근 9개 지자체(borough)로 구성되며, 전체 인구 320만 명, 면적 1,276km²(서울특별시의 2배)

3) 금융·전문서비스, 생활·과학, 문화·미디어, 경쟁력 있는 제조업, 커뮤니케이션, 국제적 연계성 강화 등이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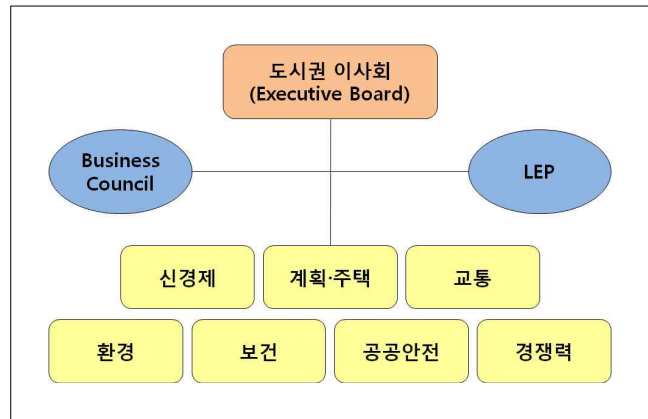
● 추진시스템

- 정책추진 주체인 광역맨체스터협의회 (AGMA)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7개 위원회로 구성

-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발전 전략의 승인, 위원회 감독, 자문 기관 구성 및 임명동의권 행사
- 10개 지자체(borough) 대표로 구성된 도시권 이사회는 지자체 간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의사결

정을 수행하고,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도시권 전체의 발전 추진

[그림 4] 광역맨체스터협의회(AGMA) 구성



- 광역맨체스터협의회(AGMA)는 다지역간 협약(MAA)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, 중앙은 이를 승인·지원하여 도시권 발전 전략을 추진

다지역간 협약(Multi-Area Agreements: MAA)

-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지역 간 공동발전 우선추진과제의 조정 등에 관해 정부가 승인, 지원하는 제도
- 협약에는 지역경제발전, 주택시장, 교통인프라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
-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며,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추진

● 법·제도 및 자원

- 맨체스터도시권은 2011년 4월 Combined Authority(CA)로 승격되면서 런던광역정부 (GLA)에 버금가는 자치권한 획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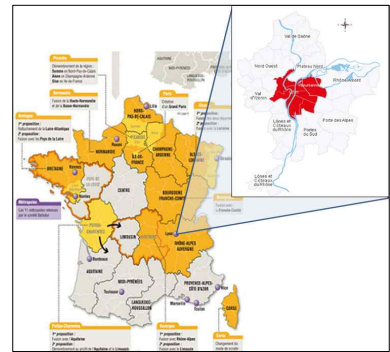
- 법정도시권으로 지정(2009년)되어 도시권 단위의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받은 맨체스터도시권은 「Local Democracy,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」에 의해 대중교통, 주택, 계획허가제 등에 관한 권한 보유
- 대중교통, 경제개발, 도시재생 등 도시권 단위의 사업추진 재원은 중앙정부의 사업단 위 직접보조금 지원 및 10개 지자체의 지방세를 통해 마련

2. 프랑스 리옹도시권(Grand Lyon)

● 배경

- 분절화된 코뮌(commune) 간 행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966년 4개 도시권(communauté urbaine)⁴⁾ 구성
 - 리옹과 인근지역은 과거부터 경제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, 1980~1990년대 세계경제통합과 도시서비스업 발달에 따라 리옹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집중 심화
 - 1966년 형성된 리옹도시권은 1990년 그랑리옹(Grand Lyon)⁵⁾으로 공식명칭 변경

【그림 5】 리옹도시권의 위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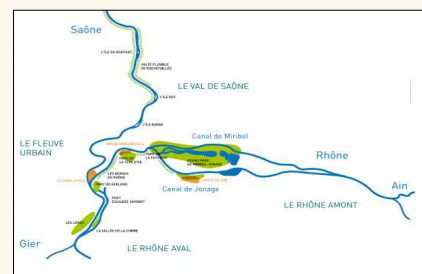
출처: <http://www.grandlyon.com>

● 목표 및 전략

- 리옹도시권은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을 목표로 하여 분야별 전략 추진(Lyon 2020)
 -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, 교통 및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세계 주요 지역과 연계성 강화, 광역적 생활서비스 공급, 광역적 경제활동 서비스 제공 등 광역적 도시발전 추진
- 리옹도시권의 차별화분야로 건강(Health), 미식(Gastronomy), 하천(River)의 3개 핵심 전략을 선정
 - 건강: ‘삶을 위한 혁신’의 관점에서 모든 정책에 건강지수를 포함하고, 삶의 질 향상, 수자원의 질 확보, 친환경산업 발전 등을 도모
 - 미식: 도시권 내 미식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하우 공유
 - 하천: 수자원 관련 파트너들이 협력, 도시권을 통과하는 하천(Saône, Gier 등)전략 수립

그랑리옹 하천종합전략(stratégie fleuve) 수립

- 그랑리옹의 경제·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, 지자체, 운하관리공사, 전력공사 등이 공동으로 메트로폴 규모의 하천전략 수립
- 산책공간 조성, 수변공간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관의 질을 높이고, 하천이 운송수단 및 산업용수 공급,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도록 전략 수립



4) 보르도(Bordeaux), 릴(Lille), 리옹(Lyon), 스트라스부르(Strasbourg)

5) 론알프스레지옹 내 57개 코뮌으로 구성되며, 인구 127만 명, 면적 515k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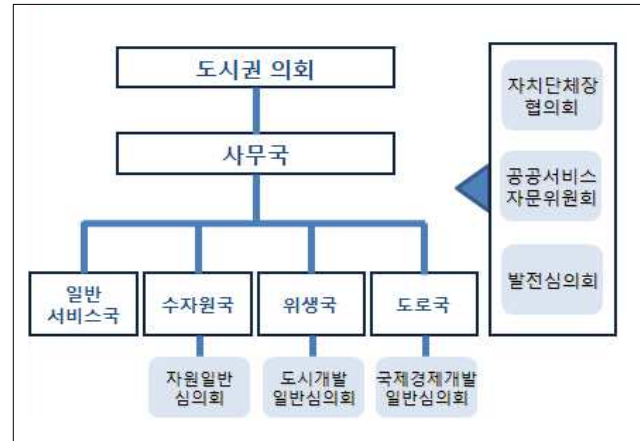
● 추진시스템

- 그랑리옹의 도시권 협력기구는 도시권 의회(conseil de communauté)와 정책 추진사무국으로 구성되며, 리옹시장이 총괄책임을 담당

- 도시권의회는 각 코뮌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구성
- 리옹지역 경제개발협의회 등 약 60여 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경제개발, 관광진흥 등을 추진

- 재계대표, 협회, 시민, 각 분야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발전심의회, 57개 코뮌의 단체장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장협의회 등도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
- 중앙정부와 계획계약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

[그림 6] 그랑리옹 도시권 협력기구



계획계약(Contrats de Plan)

- 1982년 「계획의 개혁(reform de la planification)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도입된 행정계약으로서, 국토정책기획단(DATAR)의 지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체결하는 협약
- 국가와 레지옹 간 광역계약, 산지·하천·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초광역계약, 도농권 및 도시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지역계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

● 법·제도 및 재원

- 「코뮌 간 관계의 단순화 및 강화에 관한 쉬베느망 법」에 의해 도시권 협력의 성격이 규정되고, 「지방자치단체일반법」에 의해 협력기구의 권한 부여
- 도시권 협력기구는 개별 코뮌을 대신하여 경제성장, 도시권 공간 정비, 주거, 도시정책, 공공서비스 관리, 환경보호 및 개발 등에 관한 권한 보유

- 그랑리옹의 2010년 예산은 약 167억 유로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급, 경제발전과 도시계획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

- 재원은 법인세, 국가보조금, 공공서비스 제공수입, 공채, 보조금 등으로 구성

3. 미국 시애틀대도시권(Seattle Metropolitan Area)⁶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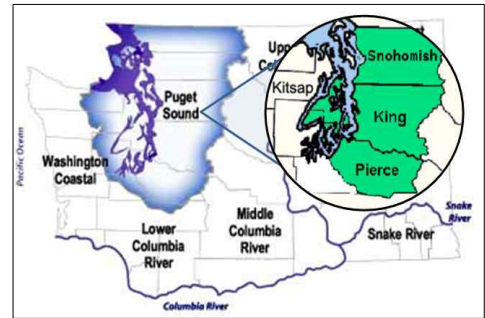
● 배경

-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도심스프롤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 성장관리정책 추진

- 1956년 카운티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출범한 광역계획회의기구인 1990년 워싱턴주의 「성장관리법」 제정으로 광역협의회(Puget Sound Regional Council: PSRC, 1991)로 발전

- PSRC는 4개 카운티와 82개 시⁷⁾로 구성된 시애틀대도시권의 광역계획기구로 경제, 교통, 주택, 환경 등 부문의 광역적 발전 추진

【그림 7】 시애틀대도시권의 위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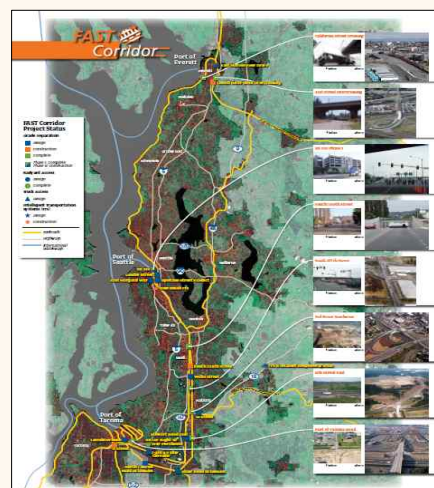
● 목표 및 정책

- 시애틀대도시권은 2040년까지 인구 170만 명, 고용인구 120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여 압축적(compact) 광역발전을 위해 환경영향 최소화, 경제적 번영, 접근성 개선,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 정책 추진

FAST(Freight Action Strategy) Corridor Partnership

- Everett-Seattle-Tacoma 항구의 물류처리 및 화물운송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98년 FAST Corridor Partnership 결성
- 파트너십은 광역교통기구, 지자체, 연방(주)정부, 항만청, 철도·트럭 협회로 구성
- 항만-철도-고속도로 등을 연계하는 지역 간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998년부터 약 5.7억 달러의 민·관기금을 조성하여 총 9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
- 2006년 이후 PSRC의 「Transportation 2040」 계획에 반영, 광역기구의 행·재정적 지원강화와 함께 추후 16개 프로젝트 추진예정

출처: Fast Corridor(2006)



6) 시애틀대도시권은 푸젓사운드만을 둘러싸고 형성된 핵심 경제지역으로 푸젓사운드지역(Puget Sound Region)으로도 불림

7) 킹카운티, 키트삼카운티, 피어스카운티, 스노호미스카운티 등 4개 카운티와 82개 도시로 구성되며, 면적 1만 6,300km², 인구 약 371만 명(2010년 기준, 시애틀시 약 61만 명), 1인당 소득액 4만 5천 달러(2009년 기준)

- 광역적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6개 부문(환경·개발패턴·주택·경제·교통·공공서비스)의 ‘카운티 공동 계획(multicounty planning policies)’을 수립하고 교통·경제부문은 별도 전략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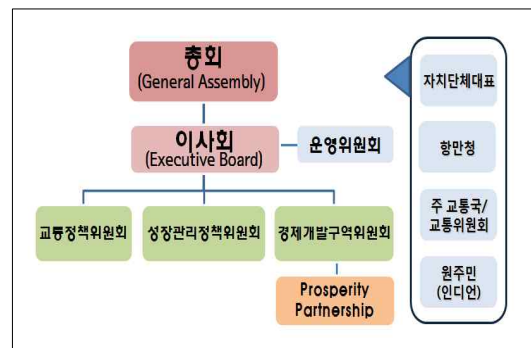
- 교통(Transportation 2040): 온실효과 절감, 주행거리(VMT) 절감, 화물수송이동성 개선, 대도시권 수질개선, 도로혼잡 해소, 직주근접 달성 등 목표
- 경제(Regional Economic Strategy, 2005):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주항공, 청정기술, 정보기술, 생활과학, 물류 등 5대 시범클러스터 선정 및 지원

● 추진시스템

- 정책추진 핵심기구는 광역협의회(PSRC)이며, 총회, 이사회, 정책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

- 총회(general assembly)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자체(선출직), 향만청, 주정부, 원주민(인디언)이 대표로 구성되며, 정관수립, 정책승인, 예산심의 등 권한 행사
- 이사회(executive board)는 교통, 성장관리, 경제 등 광역적 핵심정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적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
- 지자체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의사결정 수행

【그림 8】 시애틀대도시권 광역협의회 구성



● 법·제도 및 자원

- PSRC는 워싱턴주의 「성장관리법(Growth Management Act, 1990)」에 의거한 지자체 간 ‘인터로컬 협약(Interlocal Agreement)’에 바탕을 둬
- PSRC 운영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교통계획지원금, 주정부의 계획수립 지원금에 의존하고, 일부 회원납입금, 비회원기구의 서비스이용료에 의하여 이루어짐

인터로컬 협약(Interlocal Agreement)

- 두 개 이상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맺는 공식협약
- 협약에는 지자체 공동으로 서명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참여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계획과 용도규제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추진기구의 구성방식, 협의회-지자체-주정부 간 관계, 재정운용 등을 명시함

IV.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

● 해외 도시권 비교 및 종합⁸⁾

1 광역적 정책수요에 대응한 도시권 형성

- 도시 광역화에 대응한 생활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및 성장관리 등을 위하여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에 의한 도시권 형성
-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또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이라는 미래지향적 발전목표를 설정

구분	영국	프랑스	미국
배경	• 대중교통, 폐기물관리 등 광역차원 문제에 공동대응	• 분절화된 지자체(코뮌) 간 협력을 통해 정책효율성 제고	• 도심스프롤 현상에 대응한 광역적 성장관리 추진
목표	• 영국 북부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도시권으로 도약	•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	• 인구 및 고용증가와 압축적 광역발전

2 도시권 공동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·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

- 도시권 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공동의 계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며, 지식서비스, 환경, 문화 등 분야에 중점
- 도시권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및 관리, 물류시설 건설, 하천관리, 교육·연구기능 확충 등 다양한 연계협력 프로젝트 추진

구분	영국	프랑스	미국
도시권 공동계획	• 맨체스터도시권 개발 프로그램	• Lyon 2020	• VISION2040: '카운티 공동계획' 수립 • 교통·경제부문 계획 별도 수립
중점분야	• 금융·전문서비스, 생활·과학, 문화·미디어, 제조업, 커뮤니케이션, 국제연계성 등	• 경제 활성화, 글로벌 연계성 강화, 광역적 개발프로젝트 추진 등	• 환경·개발패턴·주택·경제·교통·공공서비스
주요 프로젝트	• 도시권 경전철 프로젝트 • 맨체스터 공항 공동관리 • 미디어시티 공동유치	• 고등교육연구거점 설치 • 메트로폴 도시관광계획 수립 • 리옹 생텍쥐페리 공항 국제공항화 • 메트로폴 하천전략 수립	• FAST Corridor Partnership 구성, 광역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철도입체교차, 항만접근성 개선 등 15개 프로젝트 공동 진행 • 도시 간 철도 건설

8) 각 사례에서 영국은 맨체스터 도시권, 프랑스는 리옹도시권, 미국은 시애틀도시권을 대상으로 함

3 권한과 예산을 보유한 지자체 간 협력추진기구 구성·운영

- 광역협의회 또는 도시권의회 등 형태의 협력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도시권 정책 추진
- 지자체 이외에 공공기관, 경제단체, 기업 등이 추진기구에 참여

구분	영국	프랑스	미국
추진기구	광역맨체스터협의회 (AGMA)	도시권의회 및 사무국 (Counseil de ommunauté/ Bureau)	광역협의회 (Regional Council)
참여주체	• 광역맨체스터 내 10개 지자체, 기업 등 민간부문	• 다수의 지자체, 리옹 경제개발협의회 등 약 60개 기관과 파트너십 형성	• 다수의 지자체, 주정부, 항만청, 기업 등 민·관 공동 참여
조직구성	• 이사회를 중심으로 7개 위원회 구성 • Business Council 등 민간중심의 자문 기구 구성	• 의회는 지자체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자로 구성 • 심의회, 자치단체장 협의회, 자문위원회 등	• 총회, 이사회, 3개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 • Prosperity Partnership 등 민·관 경제협력기구 구성

4 상호협력과 성과공유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제도 활용

-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
- 협약 주체별 권한뿐 아니라 투자분담 관련 사항도 협약 내용에 포함

구분	영국	프랑스	미국
협약	다지역간 협약(MAA)	계획계약(Contrats de Plan)	지자체 간 협약(Interlocal Agreement)
협약주체	• 다수의 지자체, 민간부문, 중앙정부	• 중앙정부, 지자체, 노동연합체, 공공 기관 등	• 다수의 시, 카운티, 주정부, 민간부문
내용	• 주택시장, 교통인프라 공급 등 지역경제 관련 사항	•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 관련 사항	• 행정구역 밖에서의 개발 공동관리 관련 사항
효력	• 협약에 대한 중앙의 권한이양 • 주택, 인프라 등 관련부문 예산운용의 자율성 부여	• 계획계약 투자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지출	• 광역권 계획수립과 추진권한을 광역 협의회에 부여

5 도시권 정책을 위한 법·제도 및 재원확보

- 각 도시권 정책 추진기구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
- 지방세·국가보조금 등을 통하여 도시권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

구분	영국	프랑스	미국
근거법률	• Local Democracy,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	• 코뮌 간 관계의 단순화 및 강화에 관한 쉬베노망법 • 지방자치단체일반법	• 주정부가 제정한 '성장관리법(1990)'
권한	• CA로 승격되어 대중교통, 계획허가 등 자치권 부여	• 경제발전, 공간정비, 주거, 공공서비스 등 권한	• 경제, 교통, 주택, 환경 등 광역적 계획권한
재원조달	• 경제개발, 교통, 재생 등 관련 사업단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보조금 • 협의회 내 10개 지자체 지방세	• 기업직접세, 국가보조금, 공공서비스 제공수입, 공채, 보조금(기타 지역기관) 등 5가지 수입으로 예산조달	• 연방정부의 교통계획지원금 • 주정부의 계획수립 지원금, 주정부-지방정부 간 회원납입금 • 비회원의 서비스이용료

● 우리나라 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

1 광역경제권 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권 정책을 도입

-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·협력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간, 기초생활권 간 사업뿐 아니라 도시권을 구성하는 광역지자체(광역시)와 기초지자체(시·군) 간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광역경제권 성장역량의 결집 및 확산 촉진

2 정책 추진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

- 도시권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문제를 지자체 간 조정 및 연계·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, 도시정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
- 도시권 발전계획의 수립과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동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,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, 인력, 예산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

3 지자체 공동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·협력 사업을 공동추진

- 도시권 발전계획은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며, 개별 지자체 단위의 공간계획 지침역할 수행
- 기초생활권, 농산어촌 중심의 연계·협력사업과 더불어 광역화된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필요

4 도시권 정책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재원 마련

- 도시권 육성전략의 추진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
- 도시권 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특회계 등에서 별도 계정 설치, 기존의 도시권 관련 기금을 재편한 통합기금 설치 등 검토
-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투자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집행력 확보

-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장 (djukim@krihs.re.kr, 031-380-0245)
-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서연미 책임연구원 (ymseo@krihs.re.kr, 031-380-0215)
-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구정은 연구원 (jeku@krihs.re.kr, 031-380-0359)
-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강민규 연구원 (mkkang@krihs.re.kr, 031-380-0271)
-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최인혜 연구원 (ihchoi@krihs.re.kr, 031-380-0192)